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2700
------------	------

제출연월일 : 2023. 7.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정이유

- 가.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나. 이에 하남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4조).
- 나. 지급대상, 지급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안 제5조부터 제8조)
- 다.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9조부터 제10조)

3. 제정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붙임(비용추제서)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3년 5월 16일 ~ 6월 5일까지(20일간)

나. 의견내용

조 항	제 정 안	의 건
제6조 1항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중략>.....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의 범위가 불특정하며, 포괄적으로 예술인이 특정하지 않은 자에 의한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술인에게 특정된 (자치단체발급 “위임용 인감증명서” 첨부로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청으로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6조2항 제3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소득의 대부분은 세금납부증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별 납세증명으로 증빙자료를 특정하는 것이 증빙자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여지므로 “소득조사”로 표현하기보다는 “소득증빙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8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중략>...,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하 생략).	재정상황 판단을 위한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기준을 명시하여, 수급자의 수급유무확인을 위한 예상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다. 의견내용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 해당 조례는 하남시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에 참여, 경기도와 재원을 공동부담하여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송부한 시군 표준 조례안을 따르고 있음
- 대리인의 범위, 소득조사,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경기도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계획이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하남시만 별도로 규정하기 어려움
- 제출의견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하도록

경기도에 송부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원안동의

9. 참고사항 : 덧붙임

- 가. 시·군 조례 제정에 관한 법제처 의견
- 나. 「예술인 기회소득」 시군 조례 표준안
- 다.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시군 참여현황 및 예산배분안

10. 관련부서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하남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하여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하남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하남시 예술인에 대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하남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문화정책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문화정책과장 이 영 수
	팀장 직위 · 성명	문화예술팀장 이 새 라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이 주 영 (790-6239)

(제1면)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 제4조부터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재원은 경기도와 하남시가 협력하여 공동부담한다.

○ 기회소득 지급 금액은 예술인 1인당 150만원으로 한다.

○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관내 예술인은 2023년 약 350명으로 하고, 매년 5%씩 증가

- 관내 예술인(예술활동증명유효자) 649명 중 지급 조건을 충족(중위소득 120%이하)하는 예술인을 약 350명이라 추정

※ 경기도 사례 조사 결과, 예술활동증명유효자의 약 50%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525	550.5	577.5	606	636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	도비	262.5	275.25	288.75	303	318
	시비	262.5	275.25	288.75	303	318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1회 추경)

○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 도비 210,000천원 / 시비 210,000천원

○ 지원금액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은 3회 추경 반영 예정

- 추가 예산 : 도비 52,500천원 / 시비 52,500천원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문화국 문화정책과장(이영수)

(제2면)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예술인 기회소득		525,000	550,500	577,500	606,000	636,000	2,89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62,500	275,250	288,750	303,000	318,000	1,447,500
	보조금	262,500	275,250	288,750	303,000	318,000	1,447,5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62,500	275,250	288,750	303,000	318,000	1,447,500
	지방세	262,500	275,250	288,750	303,000	318,000	1,447,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1 「예술인복지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6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2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5.] [경기도조례 제6669호, 2020. 7. 15., 일부개정]

제5조(사업)

-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하남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참고사항】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군 조례에도 보조금 지급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의견18-0267, 2018. 12. 13., 경기도 수원시]

【질의요지】

경기도 내 청년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있고 그 재원을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군에서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외에 해당 시·군 조례에도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군 조례에도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11. 27. 회신 17-0514 해석례 및 법제처 2015. 9. 21. 회신 15-047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규정하도록 한 “조례”란 보조금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와 해당 시·도 내의 시·군·자치구가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보조금 지원 사무를 수행하면서 시·군·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근거가 시·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시·군·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보조금의 근거를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8. 23. 의견제시 17-0196, 법제처 2017. 11. 27. 회신 17-0514 해석례,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제119쪽 참조).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등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경기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에서 경기도 내 청년들에게 사회보장적 금전으로서 청년배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의 위 각 규정내용을 더하여 보면, 청년배당 지급 사무는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공동으로 그

재원을 부담하여 수행하되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배당의 지급 근거가 경기도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배당의 지급 금액 중 시·군이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다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경기도조례 외에 시·군 조례에도 지급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③ 삭제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년배당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배당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지급대상) ①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

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생략)

【참고사항】

00시·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00시·군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00시·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00시·군 예술인에 대하여 00시·군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00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00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시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

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시군 참여현황 및 예산배분안

시군별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명) (‘23.6.25.기준)	2023년 예산배분내역(단위: 천원)				비고
		사업량*	합계	도비(50%)	시군비(50%)	
합계(31)	26,561명	9,050명	13,200,000	6,600,000	6,600,000	4개 시군 미참여
소계(4)	10,272명(38.7%)	-	-	-	-	
수원시	1,869	-	-	-	-	미참여
용인시	2,475	-	-	-	-	미참여
고양시	3,571	-	-	-	-	미참여
성남시	2,357	-	-	-	-	미참여
소계(27)	16,289명(61.3%)	9,050명	13,200,000	6,600,000	6,600,000	
화성시	1,046	500	600,000	300,000	300,000	
부천시	1,808	1,000	1,200,000	600,000	600,000	
남양주시	1,306	700	840,000	420,000	420,000	
안산시	1,089	600	720,000	360,000	360,000	
평택시	546	300	360,000	180,000	180,000	
안양시	1,114	630	756,000	378,000	378,000	
시흥시	749	410	492,000	246,000	246,000	
김포시	1,191	670	804,000	402,000	402,000	
파주시	1,083	590	708,000	354,000	354,000	
의정부시	763	440	528,000	264,000	264,000	
광주시	791	440	528,000	264,000	264,000	
광명시	578	330	396,000	198,000	198,000	
하남시	625	350	420,000	210,000	210,000	
군포시	616	360	432,000	216,000	216,000	
오산시	210	130	156,000	78,000	78,000	
양주시	324	190	228,000	114,000	114,000	
이천시	224	120	144,000	72,000	72,000	
구리시	373	220	264,000	132,000	132,000	
안성시	331	180	216,000	108,000	108,000	
의왕시	368	200	240,000	120,000	120,000	
포천시	133	80	96,000	48,000	48,000	
양평군	348	210	252,000	126,000	126,000	
여주시	208	120	144,000	72,000	72,000	
동두천시	134	70	84,000	42,000	42,000	
과천시	208	120	144,000	72,000	72,000	
가평군	84	60	72,000	36,000	36,000	
연천군	39	30	36,000	18,000	18,000	
유보액	-	(1,950)	2,340,000	1,170,000	1,170,000	